

Vol. 1

2025.1.15

Customs &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212

F. 02-545-539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정혜지전임 hjeong1@hjcustoms.co.kr

CONTENTS

- I. 법령 개정사항
- II. 입안 예고
- III. 조세심판사례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성실한 납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별로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연장하며,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확대하고, 체납세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제출기관을 추가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월별 성실납세신고 제도의 신설 (제 9 조제 4 항 및 제 38 조의 5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실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 신고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세관장은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를 한 물품의 세액을 성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연장 (제 21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종전에는 5 년으로 하였으나, 7 년으로 연장함
부정행위를 통한 과소신고의 가산세율 상향 (제 42 조제 2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종전에는 부족세액의 100 분의 40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100 분의 60 으로 가산세율을 상향함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한시적 특혜관세 적용 (제 76 조제 3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전에는 최빈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우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하던 것을,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함

구분	내용
수출·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확대 (제 235 조제 1 항 제 7 호 신설)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 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 마련 (제 254 조제 2 항 · 제 7 항 · 제 8 항)	- 전자상거래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 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해당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3 년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도록 함 - 통신판매업자 등의 등록은 폐업, 사망 및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과세자료의 제출기관 추가 (제 264 조의 2 제 7 호 신설)	-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기준 합리화 (제 270 조의 2 제 2 호)	- 종전에는 가격조작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벌금형을 5 천만원과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였으나, 신청 또는 신고한 물품가격과 과세가격 간의 차액을 추가하여 그 중 가장 높은 금액 이하로 하도록 함

(3) 시행일

2025.1.1

I. 법령 개정사항

2.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등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46개 물품에서 고속 연사기 등 8개 물품을 제외하고, 방사기 등 4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2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한편, 관세 감면율을 중소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중소제조업체 감면율	70%	50%
중견제조업체 감면율	50%	30%
적용기한	2024년 12월 31일	2026년 12월 31일
감면 대상물품*	- 제외 대상 물품(8개)	
	연번	개정내용
	1	합사기나 연사기
	2	폭 30cm 초과하는 셔틀리스형 직기
	3	자카드 직기
	4	전기화학식 디버링기
	5	수치제어방식 디버링기
	6	기어 웨이핑머신
	7	자동 캔 제조기
	8	특정 용접기
	- 추가 대상 물품(4개)	
	연번	개정내용
	1	인조섬유 방사 설비
	2	5축 수직형 가공기
	3	카바이드 공구 양단의 챔퍼 및 포인트 연삭 가공용 장비
	4	전선권선기를 포함하는 금속 처리용 권선기

*물품별 세부 규격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4] 참조 요망

(3) 시행일

2025.1.1

I. 법령 개정사항

3.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바, 2024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13개 물품에 대해 종전과 동일한 세율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정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대상 물품	13 개	13 개
적용기한	2024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3) 시행일

2024.12.5

I. 법령 개정사항

4.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에너지 분야 지원 확대를 위해 반도체 제조용 유리섬유, 나프타 제조용 원유 및 천연가스 등 55개 품목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에서 10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식품원료의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코코아두 및 커피농축액 등 5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할당관세의 적용 물품 및 세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2025년 신규 지정 물품	-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식품원료 관련 11 개 품목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table><tr><th>연번</th><th>개정내용</th></tr><tr><td>1</td><td>CCL 용 동박</td></tr><tr><td>2</td><td>CCL 용 유리섬유</td></tr><tr><td>3</td><td>노광장비용 주석괴</td></tr><tr><td>4</td><td>무수불산</td></tr><tr><td>5</td><td>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td></tr><tr><td>6</td><td>흡착제</td></tr><tr><td>7</td><td>수산화리튬</td></tr><tr><td>8</td><td>백금</td></tr><tr><td>9</td><td>페로실리콘</td></tr><tr><td>10</td><td>면사</td></tr><tr><td>11</td><td>인스턴트 커피</td></tr></table>	연번	개정내용	1	CCL 용 동박	2	CCL 용 유리섬유	3	노광장비용 주석괴	4	무수불산	5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6	흡착제	7	수산화리튬	8	백금	9	페로실리콘	10	면사	11	인스턴트 커피
	연번	개정내용																							
	1	CCL 용 동박																							
	2	CCL 용 유리섬유																							
	3	노광장비용 주석괴																							
	4	무수불산																							
	5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6	흡착제																							
	7	수산화리튬																							
	8	백금																							
	9	페로실리콘																							
	10	면사																							
11	인스턴트 커피																								
2024년 긴급할당관세 적용 물품	- 식품원료 관련 5 개 품목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table><tr><th>연번</th><th>개정내용</th></tr><tr><td>1</td><td>카카오두</td></tr><tr><td>2</td><td>커피농축액</td></tr><tr><td>3</td><td>오렌지농축액</td></tr><tr><td>4</td><td>파인애플주스</td></tr><tr><td>5</td><td>토마토페이스트</td></tr></table>	연번	개정내용	1	카카오두	2	커피농축액	3	오렌지농축액	4	파인애플주스	5	토마토페이스트												
	연번	개정내용																							
	1	카카오두																							
	2	커피농축액																							
	3	오렌지농축액																							
	4	파인애플주스																							
	5	토마토페이스트																							

(3) 시행일

2025.1.1

I. 법령 개정사항

5.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2022년 개정 이후 제기된 운영상 오류 등을 개선하고, 기술 변화에 따른 신상품 반영 및 국민 보건·환경보호 등을 위해 통관상 관리가 필요한 품목 등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신기술·신생 에너지 관련 품목 신설*

연번	HSK CODE	품명
1	8413812000	전기차의 냉각 냉매용 펌프
2	8414809211	연료전지 차량용의 기체압축기
3	8428902000	실내 서빙로봇
4	8428903000	실외 배송로봇
5	8501332010	연료전지스택
6	8501521000	전기차용의 구동 모터(출력이 750 와트 초과 75 킬로 와트 이하인 것)
7	8501531010	전기차용의 구동 모터(출력이 75 킬로와트 초과 3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8	8501621000	연료전지시스템(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9	8504402020	전기차 구동 모터용의 인버터
10	8543302000	수전해 설비

-국민보건·환경보호 등을 위해 통관상 관리 필요 품목 신설*

연번	HSK CODE	품명
1	2903891000	헥사브로모사이클로데칸(HBCDs)
2	2915909030	과불화옥탄산(PFOA)과 그 염
3	2930902010	포레이트(ISO)
4	3814001030	수소불화탄소(H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한 유기혼합용제와 시너
5	4402101010	대나무 목탄으로서 착화제가 포함된 것
6	9021391000	인공수정체
7	9021901010	스텐트

*상기 표는 대표 품목만 열거된 것으로, 세부 품목과 품번은 별도 확인 요망

(3) 시행일

2025.1.1

I. 법령 개정사항

6.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정

(1) 제정 이유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유사 분야 7개 고시 및 훈령*을 통·폐합하여 본 고시를 제정함

연번	개정내용
1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69호, 2023.12.27.)
2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13호, 2024.4.2.)
3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43호, 2022.7.29.)
4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68호, 2023.12.27.)
5	「세관수수료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49호, 2017.7.28.)
6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관세청훈령 제1872호, 2017.7.17.)
7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관세청훈령 제2326호, 2024.6.24.)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관세 등 제세의 징수결정 (제 4 조~제 6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등의 징수결정 사유 - 관세 등의 징수결정 방법 등
납부의 고지 (제 7 조~제 9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등의 납부고지 방법 - 납부기한의 연장 승인 방법 등
수납확인 및 대조 확인 (제 10 조~제 19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납 확인 방법 및 세금계산서 출력 - 한국은행 수입금 영수내용과 대조확인 및 월계 대조 - 현금 및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납 방법 등
월별납부 (제 20 조~제 34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납부 요건 및 신청 승인 취소 등 -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 한도액 사용과 전산관리 등 - 월별납부 방법 및 작성시기 등
담보관리 (제 35 조~제 51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보제공 대상, 담보의 종류 및 담보제공 범위 - 담보제공 생략대상 및 해당여부 확인신청 등 - 포괄담보의 제공 및 사용승인 등 - 담보의 추가, 변경, 해제 등

(3) 시행일

2024.12.11

I. 법령 개정사항

7.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1) 제정 이유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①「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2024-9호, 2024.2.21.), ②「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제2023-57호, 2023.9.27.), ③「관세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2049호, 2021.3.30.)을 통·폐합하여 본 고시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보세판매장 특허의 기준 및 절차 (제 3 조~제 14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세판매장 특허 요건 및 시설 요건 - 신규특허 및 특허갱신 절차
특허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 15 조~제 18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심사위원 위촉·선정 방법 및 위원회 진행 방법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제 19 조~제 26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옴부즈만의 직무·권한 및 의무 - 청렴옴부즈만의 선정 및 권고사항 처리절차 등
운영인의 의무 및 판매물품 반출입 절차 등 (제 27 조~제 46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준수 사항 -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의 반출입 절차 및 판매 방법 - 시내면세점 판매물품의 인도절차 - 보세판매장간 물품 양수도 업무처리 절차 - 미인도 물품 및 반품, 분실물 등의 처리 절차 등
업무감독 및 협의단체 등 (제 47 조~제 51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세판매장에 대한 세관장의 업무감독 사항 및 담당 공무원의 임무 - 보세판매장 협의단체의 업무 범위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 반영 (제 42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장에서 미인도 된 물품을 보세판매장 외에도 통합물류창고로 반입할 수 있도록 개선

(3) 시행일

2024.12.5

I. 법령 개정사항

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의 부정한 행위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범위 확대 (제 9 조제 2 항)	-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과 관계없이 수정신고를 한 날부터 3 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적용 대상 확대 (제 31 조제 2 항 및 제 32 조제 1 항)	- 자유무역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기재한 사전심사서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그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수입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가산세 상향 조정 (제 36 조제 1 항 제 1 호 단서)	-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100 분의 40'에서 '100 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함

(3) 시행일

2025.1.1

I. 법령 개정사항

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통관업무의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협정관세율 (제 2 조제 23 항 및 별표 17 의 8 신설)	- 수입자가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원산지 조사결과 통지기간 (제 13 조제 1 항 제 16 호 신설)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리핀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등 (제 21 조~제 27 조)	-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필리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필리핀과 협의하도록 함 -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총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3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필리핀과 협의하도록 하고, 1 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 (제 33 조~제 34 조)	-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에 관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그 사실을 필리핀에 통보하도록 하고,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필리핀에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3) 시행일

2024.12.31

I. 법령 개정사항

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2025년 1월 1일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수출자,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 증명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2025년 1월 1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한-필리핀 FTA 협정 원활한 이행을 위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정 적용 범위 지정-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규정- 원산지증명서 서식, 상업송장 기재 문구와 작성방법- 원산지 조사 관련 사항- 수입 후 1년 이내 재수출하는 일부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규정
RCEP 이행을 위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수출입 거래에서 수출자,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도록 함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일부개정 내용에 따라 품목번호 및 품명을 정비함

(3) 시행일

2024.12.31

I. 법령 개정사항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2024년 12월 31일에 발효된 한-필리핀 FTA 시행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FTA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고시 정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한-필리핀 FTA 협정 및 FTA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절차 정비	
	고시 조항	개정내용
	제28조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 “소급발급” 문구 기재
	제34조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 “진정등본” 보증문구 기재
	제35조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 정정발급 절차 규정(잘못된 부분에 선을 긋고 정정하거나 신규 원산지증명서로 대체 발급)

(3) 시행일

2024.12.31

I. 법령 개정사항

12.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제정

(1) 제정 이유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협정 내용을 안내하고자 제정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상품 양허 현황	- 한-필리핀 FTA 발효로 인해 우리 측은 품목수 기준 3.6%, 필리핀측은 18.5% 추가 관세철폐		
	구분	한국 양허 주요 품목	필리핀 양허 주요 품목
	즉시 철폐	승용차, 화물자동차	승용차, 자동차 부품
	3년 철폐	식물제 의류, 당류	-
	5년 철폐	바나나, 자동차 부품	전기자동차, 화물차CKD
	10년 철폐	플랜틴바나나, 통신선	-
	15년 철폐	제재목, 과일주스, 굴	냉동어류, 공기조절기
	관세 감축	계, 냉동오징어, 타일	차량용 의자, 스프링
원산지 증명	- ①기관발급, ②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③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발효 후 10년 내에 이행)		
	- 자율증명은 협정의 표준서식을 이용하거나, 상업송장 또는 포장명세서 등의 서류에 하기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규정함		
원산지 결정기준	-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일반규칙 :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본선인도가격 가치의 40 퍼센트 이상이거나 4 단위 세번변경 기준		
	- 그 외 섬유, 자동차 및 농축수산물과 같은 품목은 협정 부속서상 개별 규칙을 따르되 한-아세안 FTA 대비 비교적 기준이 완화됨		

*상기 내용 이외의 원산지 검증 등 기타 사항은 별첨 원본 서류 참조 요망

(3) 시행일

2024.12.31

I. 법령 개정사항

13.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개정

(1) 개정 이유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2025년 1월 1일부터 RCEP에 따른 수출자,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인증수출자, 수출자, 생산자의 자율증명을 위한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의 작성방법을 일부 개정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RCEP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 발급주체 추가	- ①원산지인증수출자, ②일본, 호주 또는 뉴질랜드로 부터 수입하거나 그 나라로 수출하는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3) 시행일

2025.1.1

I. 법령 개정사항

14.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을 추가함

(2) 주요 내용

제20조의 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②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수소제조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수소제조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text{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 = \text{수소제조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times (\text{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세액} - \text{같은 호 마목의 세액})$$

(3) 시행일

2025.4.1

I. 법령 개정사항

1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석유가스 중 부탄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5년 2월 28일까지
발전용 천연가스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5년 6월 30일까지
유연탄		

(3) 시행일

2025.1.1

I. 법령 개정사항

16.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임상적 성능시험의 범위를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는 기관에서의 검체 분석을 필요로 하는 임상적 성능시험 등으로 정하고,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첨부하는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에 임상적 성능시험이 아닌 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 포함 사항 추가 (제 13 조제 2 항 제 3 호)	-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에 관한 사항 (임상적 성능시험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해당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임상적 성능시험 참여기관의 임상적 성능시험 (제 14 조의 2)	- 임상적 성능시험의 특성상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임상적 성능시험의 경우에 대해 규정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관리기준 등 (제 17 조제 1 항)	- 임상적 성능시험 참여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의 실시·관리기준 신설
관련 서식 수정 (별지 제 9 호 및 제 10 호)	-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신청서 (별지 제 9 호) 및 승인서(별지 제 10 호)상 임상적 성능시험 참여기관란 추가

(3) 시행일

2024.12.23

I. 법령 개정사항

17.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의 제조소 기재 방법을 상시 연락 또는 방문 가능한 주된 주소만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산업계 부담 완화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용기나 외장의 업체 주소 기재방법 개선 (안 제 6 조)	- 제조(수입)업허가증 기준으로 상시 연락 또는 방문이 가능한 주소를 주된 주소로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
현행 규정 반영한 용어변경 등 (안 제 8 조 및 제 9 조)	- 허가·인증·신고사항 확인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명칭(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수어 용어 반영

(3) 시행일

2024.12.4

I. 법령 개정사항

18.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대하여 국제규격과 부합하도록 신설, 개정 등을 통해 국내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 및 품질 수준을 제고하여 국민보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	- 하기 2 종에 대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의 국제규격 (IEC, ISO) 적용으로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	
	구분	물품
	의료용품 및 치과재료	14. 연고형근관충전재, 치과용근관충전실러
	기구·기계	48.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3) 시행일

2025.1.1

I. 법령 개정사항

19.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완제의약품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수입품목허가 신청 등에 요구되는 제출 자료를 간소화하고, 원료의약품 등록 요건으로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를 국제 기준에 맞는 증명서 제출로 변경하는 한편, 원료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 연장을 위한 확인·조사를 천재지변 등의 경우 현장조사 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 자료 간소화 (안 제 4 조제 1 항 제 6 호)	-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 자료 중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조소 총람, 품질(보증)체계 관련 자료, 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품질관리 기록서 사본 등으로 간소화
원료의약품 등록 시 제출 자료 개선 (안 제 15 조제 1 항 및 제 17 조제 1 항)	- 원료의약품을 등록 시 제조판매품목은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 사본을 제출하고, 수입품목은 생산국의 정부기관 또는 의약품실사상호 협력기구 가입 정부기관이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 신청에 필요한 제출 자료 간소화 (안 제 48 조의 2)	- 의약품 등이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을 받으려는 제조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조소 총람, 품질(보증)체계 관련 자료, 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품질관리기록서 사본 등으로 간소화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 조사 방법의 개선 (안 제 48 조의 4 제 1 항제 2 호 신설)	- 적합판정을 받은 의약품 등에 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 제조소의 중대한 변경 이력이 없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외의 방법으로 확인·조사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2024.12.30

I. 법령 개정사항

20.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이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로 인정 심사하여 반려·취하한 이력이 있는 원료를 다시 심사할 때, 반려·취하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존에 심사 완료된 자료 이외에 보완하여 추가로 제출한 자료만 검토하도록 하여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제8조의2(재신청 서류의 처리)를 신설하여, 반려 또는 취하된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으로서 반려 또는 취하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간내에 재신청된 인정신청서는 보완된 자료 또는 취하 전까지 심사완료된 자료 이외의 자료만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만, 해당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방법 등 기준·규격이 종전에 신청한 내용과 변경되었거나 안전성과 기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등 자료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3) 시행일

2024.12.9

II. 입안예고

1.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입안 이유

영양표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2004호, 2024. 12. 30.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식품유형별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조리되지 않고 손질된 자연산물과 가공식품이 함께 들어있는 식품에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도안을 신설하는 한편, 외국어로 표시된 수출 식품에 대해 한글표시사항을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여 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영업자의 혼선을 방지하는 등 표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외국어로 인쇄된 수출용 식품에 대해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부착 허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수출 제품에 대해 기부용, 행사용,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한글표시사항을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허용
관련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및 자구 수정	- 영양표시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식품유형별로 반영하여 조문 정비
관련 규격의 개정사항 반영 및 규정 정비	- 조미감의 유형 명칭 및 식품첨가물 명칭 정비 - 위탁생산제품(OEM)은 해당 생산제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가 표시된 제품은 표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통전문판매업은 수입식품과 관련이 없으므로 영업자 혼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규정 정비 등
간편조리세트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서식도안 마련	-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제품에 대하여 조리되지 않고 손질된 자연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영양표시 도안을 마련

(3) 의견제출기한

2025.2.28

Ⅲ. 조세심판사례

1. 청구법인이 특수가스와 이를 담은 전용용기를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 면세를 적용 받은 것과 관련하여, 감면 부적정, 용도외사용 및 부정 감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1) 주요 내용

가. 청구법인은 특수가스와 특수가스를 담은 전용 ‘용기’를 수출입하고 있으며, 수입 시 「관세법」 제 97 조에 의한 재수출 면세를 적용 받아왔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수출면세를 받아 수입신고한 용기에 대하여 부정 감면, 감면 부적정 및 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음

나. 청구법인은 재수출 이행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수입건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며, 구체적인 과세 근거가 없으며, 시스템상 문제로 인한 허위신고일뿐 부정한 의도로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의도가 아님을 주장하였음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재수출 이행기간 연장사유가 일률적이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방문 심사 결과 복잡한 거래관계에도 불구하고 용기 관리 시스템이 매우 미흡한 점 등을 근거로 관세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임을 주장하였음

(2)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사후관리 물품이므로 재수출 이행 여부의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이러한 관리가 미흡했던 점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였음. 그러나 수입 당시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재수출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도 경정한 사실은 타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조사내용이 불명확, 불충분해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재조사하여 경정해야함. 처분청이 주장하는 「관세법」 제42조에 따른 가산세는 쟁점 물품의 부정 감면 또는 감면 부적정에는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3) 결정일

2024.12.4 (조심 2023관0082)

Ⅲ. 조세심판사례

2. **쟁점물품(백킹플레이트에 타겟이 결합된 타겟플레이트)을 반도체제조용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타겟 재질에 따라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공업용 도자제품 등으로 보아 HSK 제6909.12-0000호 등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1) 주요 내용

가. 청구법인은 구리 합금 재질의 백킹 플레이트에 다양한 재질의 타겟이 결합된 Target Plate를 타겟의 재질에 따라서 분류하여 수입 신고하였으며, 수입 신고 이후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타겟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함을 회신받았음.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반도체 장비의 부분품'이므로 HSK 제 8486.90-2010 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여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타겟과 백킹 플레이트가 일체형으로 접합된 물품으로서 반도체 제조공정 중 증착 공정에 사용되므로 반도체 제조설비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며 또한, 타겟은 웨이퍼의 금속망 형성을 위해 증착되는 재료에 불과하나 백킹 플레이트는 증착 작업 시 실링, 음극, 쿨링 기능 등을 수행함에 따라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징은 백킹 플레이트에 있으므로 제 8486 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다. 처분청은 백킹 플레이트가 재사용되지 않거나 내부에 냉각수 순환 홈이 없으므로 백킹 플레이트 자체가 증착기의 부분품이 아니며, 타겟의 소재에 따라 공정상 불량률의 차이가 나므로 타겟에 본질적 특성이 있다고 보아 타겟의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2)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분석 결과 청구법인의 의견대로 반도체 제조공정 중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486호에 분류함.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구조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실제 기능이 거의 동일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단지 경제적 이유로 재사용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며,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물품에 대하여 사후 반복 사용 여부만으로 품목분류를 달리 할 법적 근거나 기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

(3) 결정일

2024.12.12 (조심 2024관0085)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2024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1) 대상 물품

연번	내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설명 :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진공챔버 내부의 압력을 자동조절 - 변경 사유 : 압력을 자동조절하는 매노우스타트에 해당함 <table> <tr> <th>변경 전</th><th>변경 후</th></tr> <tr> <td>제 8481.80-1030 호 (그 밖의 자동제어식 밸브)</td><td>제 9032.20-0000 호 (매노우스타트)</td></tr> <tr> <td>기본 관세 8%</td><td>협정 관세 0%</td></tr> </table>	변경 전	변경 후	제 8481.80-1030 호 (그 밖의 자동제어식 밸브)	제 9032.20-0000 호 (매노우스타트)	기본 관세 8%	협정 관세 0%
변경 전	변경 후						
제 8481.80-1030 호 (그 밖의 자동제어식 밸브)	제 9032.20-0000 호 (매노우스타트)						
기본 관세 8%	협정 관세 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설명 : 내시경에서 취득한 영상을 편집하는 기계 - 변경 사유 : 영상을 편집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 전기기기에 해당함 <table> <tr> <th>변경 전</th><th>변경 후</th></tr> <tr> <td>제 8537.10-2000 호 제 8537.10-9000 호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제어반 등)</td><td>제 8543.70-9090 호 (기타 고유의 전기기기)</td></tr> <tr> <td>기본 관세 8%</td><td>기본 관세 8%</td></tr> </table>	변경 전	변경 후	제 8537.10-2000 호 제 8537.10-9000 호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제어반 등)	제 8543.70-9090 호 (기타 고유의 전기기기)	기본 관세 8%	기본 관세 8%
변경 전	변경 후						
제 8537.10-2000 호 제 8537.10-9000 호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제어반 등)	제 8543.70-9090 호 (기타 고유의 전기기기)						
기본 관세 8%	기본 관세 8%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설명 : 세포 등 배양을 위한 발효조 - 변경 사유 : 단순히 온도의 변화에 따라 재료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배양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의 기계에 해당함 <table> <tr> <th>변경 전</th><th>변경 후</th></tr> <tr> <td>제 8419.89-9090 호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재료 처리 기계)</td><td>제 8479.89-9099 호 (기타 고유의 기계)</td></tr> <tr> <td>기본 관세 8%</td><td>기본 관세 8%</td></tr> </table>	변경 전	변경 후	제 8419.89-9090 호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재료 처리 기계)	제 8479.89-9099 호 (기타 고유의 기계)	기본 관세 8%	기본 관세 8%
변경 전	변경 후						
제 8419.89-9090 호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재료 처리 기계)	제 8479.89-9099 호 (기타 고유의 기계)						
기본 관세 8%	기본 관세 8%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설명 : 분광계를 이용한 분석기기에 장착되어 액체 시료를 담아 빛을 투과시키는 반응용기 - 변경 사유 : 분석기기 내부에 장착되고, 직접 빛이 통과되어 시료의 흡광도를 분석하는데 적합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에 해당함 <table> <tr> <th>변경 전</th><th>변경 후</th></tr> <tr> <td>제 3926.90-9000 호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td><td>제 9027.90-9099 호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td></tr> <tr> <td>협정 관세 6.5%</td><td>협정 관세 0%</td></tr> </table>	변경 전	변경 후	제 3926.90-9000 호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	제 9027.90-9099 호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	협정 관세 6.5%	협정 관세 0%
변경 전	변경 후						
제 3926.90-9000 호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	제 9027.90-9099 호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						
협정 관세 6.5%	협정 관세 0%						

연번	내용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설명 : 설탕에 팔랑금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양갱 - 변경 사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캔디류 정의에 적합한 물품에 해당함 <table> <tr> <th>변경 전</th><th>변경 후</th></tr> <tr> <td>제 1704.90-9000 호 (그 밖의 설탕과자)</td><td>제 1704.90-2090 호 (그 밖의 캔디류)</td></tr> <tr> <td>기본 관세 8%</td><td>기본 관세 8%</td></tr> </table>	변경 전	변경 후	제 1704.90-9000 호 (그 밖의 설탕과자)	제 1704.90-2090 호 (그 밖의 캔디류)	기본 관세 8%	기본 관세 8%
변경 전	변경 후						
제 1704.90-9000 호 (그 밖의 설탕과자)	제 1704.90-2090 호 (그 밖의 캔디류)						
기본 관세 8%	기본 관세 8%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설명 : 텍스처드사(70%)와 비텍스처드사(30%)를 합성한 실 - 변경 사유 : 텍스처드사가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물품에 해당함 <table> <tr> <th>변경 전</th><th>변경 후</th></tr> <tr> <td>제 5402.61-0000 호 (나일론의 복합사 또는 케이블사)</td><td>제 5402.33-9000 호 (폴리에스테르의 텍스처드사)</td></tr> <tr> <td>기본 관세 8%</td><td>기본 관세 8%</td></tr> </table>	변경 전	변경 후	제 5402.61-0000 호 (나일론의 복합사 또는 케이블사)	제 5402.33-9000 호 (폴리에스테르의 텍스처드사)	기본 관세 8%	기본 관세 8%
변경 전	변경 후						
제 5402.61-0000 호 (나일론의 복합사 또는 케이블사)	제 5402.33-9000 호 (폴리에스테르의 텍스처드사)						
기본 관세 8%	기본 관세 8%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설명 : 넥라인을 기점으로 전면이 파스너로 개방되고 소매가 뚫린 신생아용품 - 변경 사유 : 의류의 기능이 추가된 신생아 용품이므로 유아용 의류에 해당함 <table> <tr> <th>변경 전</th><th>변경 후</th></tr> <tr> <td>제 6307.90-9000 호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td><td>제 6111.20-1000 호 (면으로 만든 편물제 유아용 의류)</td></tr> <tr> <td>기본 관세 10%</td><td>기본 관세 8%</td></tr> </table>	변경 전	변경 후	제 6307.90-9000 호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	제 6111.20-1000 호 (면으로 만든 편물제 유아용 의류)	기본 관세 10%	기본 관세 8%
변경 전	변경 후						
제 6307.90-9000 호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	제 6111.20-1000 호 (면으로 만든 편물제 유아용 의류)						
기본 관세 10%	기본 관세 8%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설명 : 꼬투리를 제거한 녹색의 풋 대두를 블랜칭하여 냉동한 것 - 변경 사유 : 데친 냉동 풋 대두는 냉동채소가 아닌 제 1201 호(대두)로 분류하여야 하나, 동 사례는 제 12 류에서 허용하는 범위의 가공(blenching)인지 확인 곤란하므로 품목분류 혼선 방지를 위해 해당 결정을 삭제함 <table> <tr> <th>변경 전</th><th>변경 후</th></tr> <tr> <td>제 00710.29-0000 호 (냉동 채두류)</td><td rowspan="2">삭제</td></tr> <tr> <td>기본 관세 27%</td></tr> </table>	변경 전	변경 후	제 00710.29-0000 호 (냉동 채두류)	삭제	기본 관세 27%	
변경 전	변경 후						
제 00710.29-0000 호 (냉동 채두류)	삭제						
기본 관세 27%							

(2) 시행일

2024.12.12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미(美), 고대역폭메모리(HBM)·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조치 발표

- 미(美),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적용으로 우리나라 포함 제3국 산(産) 제품도 통제
-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 수출통제 상담창구 운영 등 다각적 노력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12월 2(월) 오전 8시 45분(현지시각), 고대역폭메모리(High Bandwidth Memory, HBM) 및 첨단 반도체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하고 관보에 게재하였다.

① HBM 통제 도입 (2025.1.1 부터 시행)

미국은 HBM 통제를 위해 특정 사양의 동적 램(DRAM) 반도체를 수출통제 대상 품목으로 새롭게 추가하였다. 미국 발표에 따르면 현재 생산 중인 모든 HBM이 통제 대상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 제품을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중국 포함 24개 국가)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다만, 로직칩 등과 함께 패키징 된 후의 HBM은 통제되지 않으며, HBM2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허가 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② 반도체장비 통제 확대 (2025.1.1 부터 시행)

미국은 기존의 첨단 반도체장비 통제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통제하고 있는 29종의 첨단 반도체장비에 더하여 열처리·계측장비 등 새로운 반도체장비 24종 및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3종 등을 수출통제 대상 품목으로 새롭게 추가하였다.

③ 미국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 확대 (발표 즉시 시행)

미국은 국가안보 사유로 중국 소재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Fab) 및 반도체장비 제조 기업 등 140개 기업·기관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하였다.

④ ‘해외직접생산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 FDPR) 면제국 지정 (반도체 장비에 한해서만 적용)

일본, 네덜란드 등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반도체장비 수출통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반도체장비와 관련이 낮은 33개국이 FDPR 면제국으로 지정되었으며, 면제국이라 하더라도 실제 통제 효과는 유사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 수준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시행하지 않아 면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미국의 HBM 및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조치에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 FDPR)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미국 외의 제3국에서 생산된 HBM 및 반도체장비라도 특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미국산 제품으로 간주되어 통제 대상이 된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을 미국의 안보우려국 또는 우려거래자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 허가가 필요하다.

이번 조치 및 FDPR 적용에 따라 HBM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에도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 미국 규정이 허용하는 수출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도체장비의 경우 통제 대상이 미국의 국가안보 관점에서 중요성이 큰 첨단 수준 반도체장비로 설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국내 기업은 소수인 것으로 파악되어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조치이나, 한미동맹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양국간 긴밀히 협의해왔다. 정부는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가며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이번 조치의 영향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양국 기업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협의하였다.

정부는 이번 미국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기업의 수출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12월 4일 반도체장비 업계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이번 미국 조치의 상세 내용을 공유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와 무역안보관리원(KOSTI)에 “수출통제 상담창구”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2. CPTPP, 英 공식 합류로 12개국 확대…"자유무역 중요성 재확인"

- 아태 지역 이외 국가 가입은 최초…회원국 GDP 세계 비중 12→15%

영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한 것을 인정하는 의정서가 15일 발효됐다고 아사히신문과 NHK가 보도했다. 2018년 출범한 CPTPP 회원국이 늘어난 것은 처음이며,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아닌 나라가 가입한 것도 최초다.

영국이 CPTPP에 참여하면서 회원국은 12개국으로 늘었고 경제권이 유럽으로 확대됐다. 기존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다.

영국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이후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공을 들이면서 일본이 주도하는 CPTPP 가입을 신청했고, 지난해 기존 회원국들이 가입에 합의했다. 영국이 CPTPP에 합류하면서 이들 회원국의 국내 총생산(GDP)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서 15%로 높아졌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처음 집권했을 당시인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결정하자 미국을 제외한 일본, 캐나다, 호주 등 나머지 국가가 만들었다.

아사히는 영국의 CPTPP 가입과 관련해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자유무역의 의의를 재확인하는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도통신도 "세계가 보호주의로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는 일본과 영국 등 회원국이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지 않은 체제로 시장 개방 노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줄리아 롱바텀 주일 영국대사는 "CPTPP는 아시아·태평양을 넘는 체제가 돼 보다 넓은 자유무역 지역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3. 무역위, 석유수지 잠정 덤프방지관세 부과

-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잠정덤프방지관세 4.45~18.52% 부과 건의
- 착즙기 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 침해 판정
- 중국 인니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등 2건 공청회 개최
- '24년 무역위 조사신청, 덤프 10건(최근 10년간 최대), 지재권 침해 등 14건(1992년 이래 최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12월 19일(목) 제455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코오롱인더스트리(주)가 조사 신청한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프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 덤프방지관세 4.45 ~ 18.5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국내기업 (주)휴롬이 국내기업 A사를 상대로 제소한 「착즙기 특허권 침해」 조사 건은 A사가 (주)휴롬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또한, (주)한솔케미칼이 신청한 「중국산 차아황 산소다」 (사)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태국산 파티클보드」 덤프 조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신청한 「커넥티드카 특허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조사 개시한 「중국·인니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과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의 반덤핑조사 국내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동 건들에 대하여는 향후 국내외현지실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각각 최종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강화, 첨단기술 경쟁 심화로 세계적으로 무역 구제조치는 증가 중이며, 올 한해 무역위원회에 신청된 조사 건수도 덤프는 최근 10년 동안 최대,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는 1992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전세계 신규조사(원심기준, 건수): 미국('22) 19, ('23) 61, ('24.1~7월) 40

한국('22) 4, ('23) 2, ('24.1~12월) 7

덤핑조사는 올해 신청된 10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중 6건은 덤프방지관세 부과, 1건은 조사종결 처리하고 현재 9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올해 신청된 14건을 포함하여 총 27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중 14건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13건에 대해 조사 진행 중이다.

양병내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2025년 글로벌 공급과잉은 국내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무역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저가공세, 무역에 따른 지재권 침해 등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 잠정 덤프방지관세 부과를 적극 건의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나아갈 것” 밝혔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4. 한-베트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 우리나라 10대 수출교역국과 모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하는 쾌거 이뤄내
- 대(對) 베트남 수출비관세 장벽 완화 및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관세청은 12월 24일(화)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인 베트남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한 국가에서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여 해당 국가에서 신속통관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 24개국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 중이며 베트남이 25번째 체결국임

양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은 2016년부터 그 논의가 시작됐으나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던 중, 지난해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23.6.23.)을 계기로 다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 대(對) 베트남 수출 중 약 57%에 해당하는 303억 달러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로 우리나라는 10대 수출교역국과 모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고광호 관세청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이자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한-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이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응웬 반 터 베트남 관세총국장은 “이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더욱 가속화되고 양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이 이번 한-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에 따른 통관 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5. 오는 2025년, 수출중소기업 관세환급 혜택 확대

- 관세청·기재부,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 개정 ... 수출중소기업 부담 완화 목적
-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32개 추가 지정 및 기존 254개 품목 환급률 상향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5년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4,574개로 확대(전년대비 +32개)하고 '25.1.1.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물품에 적용한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중소기업이 수입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로, 매년 약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약 1천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1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또한, 신상품 출시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가 개정('25.1.1. 시행)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새롭게 추가했다.

한편, 안전벨트, 헤어드라이어, 칫솔 등 25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전년도보다 환급률을 상향하여 수출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지정 품목>

구분	내용
1	건조한 김(세번 1212.21-1010)
2	일산화탄소(세번 2811.29-1000)
3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세번 2836.99-2000)
4	가스마스크(세번 9020.00-1000)
5	주물의 주형·코어용 조제 점결제(세번 3824.10-0000)
6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 및 이들의 연결구류(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세번 3917.32-1000)
7	대마섬유 직물(세번 5311.00-2000)
8	리머(reamer, 세번 8207.60-1000)
9	신품 굴삭기(세번 8429.52-1011)
10	금속 가공용 기계·기구의 칼·칼날(세번 8208.10-0000)
11	파리미단, 그 염과 그 밖의 파리미단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세번 2933.59-2000)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6.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대비, 무역구제제도 정비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시장개방에 따른 특정품목 수입급증에 대비, 국내산업 피해 구제수단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24(화)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은 '24.12.31일 발효되는 한-필리핀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FTA에 따른 시장개방의 결과로 필리핀산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 「FTA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긴급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인하를 중지함으로써 국내시장의 산업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FTA세이프가드 조치는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양자)간 발동이 가능하고, 글로벌 세이프가드조치는 WTO 협정에 근거하여 WTO 회원국들(다자) 간 발동

아울러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FTA 체결 취지에 맞게, 동 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장치는 우리 기업들이 필리핀으로부터 FTA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받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향후 우리 측의 수출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관세인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안전장치가 마련된바, 양 당사국 간 보다 원활한 무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필리핀 양국은 FTA 발효에 따른 무역·투자 확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연내 발효에 합의하였으며, 이번 무역구제 관련 개정사항도 발효일인 '24.12.31일부터 시행된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7. 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통상변화대응법」 1월 1일부터 시행

- FTA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IPEF, 디지털협정 등 신통상 협정까지 지원 확대
- 피해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 도입
- 피해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에서 5% 감소로 완화

그간 정부는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기업 대상 자금융자 중심으로 지원해왔으나, 공급망, 디지털 등 최근의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서는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변화대응법”)로 명칭 변경과 함께,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통상변화대응법은 '25.1.1.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정 이행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한다. 이에 지원대상 협정을 무역 통상에 관한 조약 등(이하 “통상조약 등”)으로 확대했으며, 지원대상이 되는 ‘통상조약 등’의 범위를 '24.12.26. 고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2호,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

둘째,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일회성 자금 융자는 폐지(5년 후 일몰)하고 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했다. 기업의 경영환경 기초진단 및 기술·경영 전문가 현장 파견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셋째,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 기업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동종 또는 직접 경쟁 품목 수입의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의 수입 감소, 최종생산품의 수출 감소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받은 통상영향의 판단 기준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했다.

아울러, 기존 무역조정지원센터로 무역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위를 이어받아 통상변화대응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자금 융자 및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진공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변화대응 지원 전반과 관련된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진혁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통상변화대응법 시행으로 신통상규범협정의 확대 등 최근의 통상정책 흐름을 반영하여 시의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언급하며,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